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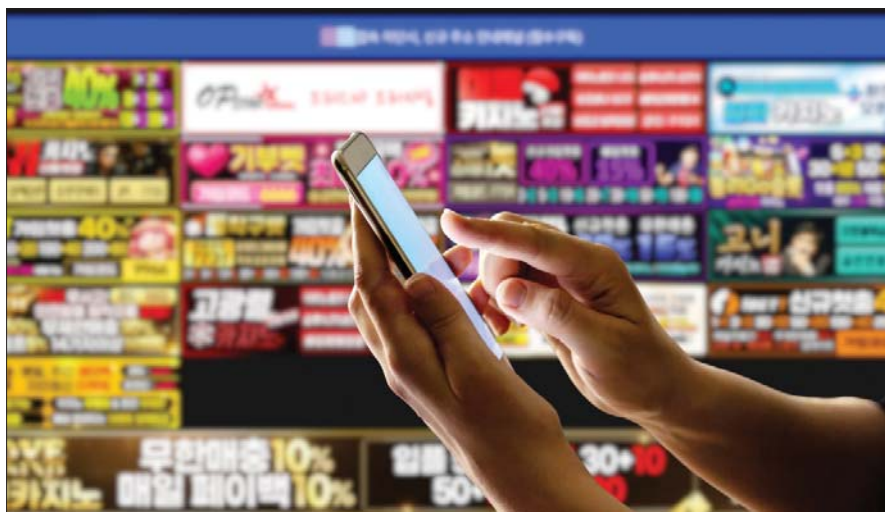
공짜웹툰 보려다 도박 빠진다... 불법웹툰 단속 대책 시급

콘진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불법웹툰 이용률 20% 4465억 피해
배너 게시로 '불법도박' 끌어들여
웹툰작가 저작권 침해 등도 심각
방통위 단속인력 충원에 단속하고
AI기반 모니터링 기술 등 의견도

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불법웹툰 사이트는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이거나 연재 완료한 웹툰과 웹소설, 만화를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하는 곳을 뜻한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영화와 OTT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까지 게시한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하고,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6년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록 불법웹툰 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불법 도박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 /김서현 기자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로 전체 산업의 446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는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다.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사실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 원에 달하는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

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또한 당시 주범이 얻은 수익은 9억 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대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있어 누누티비, 밤토끼 등 최대 사이트 폐쇄는 경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최대 사이트를 키울 기회가 된다. 새로운 사이트가 성장하면 또다시 도박 광고 배너는 빈자리 없이 사이트를 빼곡하게 채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업계에는 저작권 침해를, 청소년 등에게는 불법 도박의 창구가 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현재 국내 IP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 한계가 지목된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국내법을 피하고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해외 서버 영업과 적발시 자동으로 변환되는 URL 체계 또한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발과 원천 차단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08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는 온라인 도박 규모(이용자 기준)는 37조5059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불법 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는데,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이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AI는 사이트 생성 패턴과 불법 콘텐츠 특성을 학습해 운영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3000만원대 전기 SUV' 中 BYD, 韓 상륙

BYD, 아토3 등 올해 3개 모델 판매
삼천리EV 등 국내 6개 공식 딜러사와
15개 전시장, 서비스센터 순차 오픈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포비아(공포증)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사업 전략과 신차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BYD코리아는 올해 3000만원대 초반의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시작으로 전기 세단 '셀'(SEAL), '씨라이언 7'(Sealion 7) 등 3개 모델을 판매할 계획이다.

BYD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무리하게 판매량을 늘리기보다 고객 체험과 소통을 통해 제품을 알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BYD코리아는 DT네트웍스, 삼천리EV, 하모니오토모빌 등 6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및 도시에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를 순차 오픈한다.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행사에서 류세양 아시아태평양 지역 BYD영업사업부 총경리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BYD 영업을 책임지는 류세양 총경리는 "고객 편의 및 딜러 파트너사들의 건강한 성장에 가치를 두고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BYD 매장이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한번쯤 방문해야 하는 곳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BYD 코리아가 국내 처음 선보이는 아토3는 2022년 출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다. BYD의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21km다. 파노라믹 선루프, V2L 등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격은 트림별로 기본 모델은 3150만원, 상위 모델인 아토3 플러스는 333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아토3의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2000만원대 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토3와 경쟁할 국내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나 일렉트릭은 스탠다드 4142만원, 롱레인지 4566만원부터, 기아 EV3는 스탠다드 3995만원, 롱레인지 4415만원부터 시작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 아도 3000만원대를 형성해 아토3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지원 집행과정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권한대행, 소상공인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용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최대치 확보

당정 협의의, 외래진료 공백 해소
2주간 '비상응급대응주간' 지정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최대치

를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에서 12월30일~올해 1월5일 4주 만에 99.8명으로 13.7배 불었다. 12월 23~27일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명 늘었다. 증가한 환자 중 41%(1357명)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개 소에는 1대 1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 배후진료 수기도 추가인상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오늘·내일 중 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1면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서 계속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이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 이후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이날로 예상됐었다.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체포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 다음날 이뤄지기에, 금요일인 17일 심사를 위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에 수사 관계자료를 접수하면, 서류가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며,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들이 체포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